李 정부 '연금개혁' 시동… 기초연금 차등·퇴직연금 기금화

기초연금 저소득층 차등지급 도입
부부 감액 완화·직역연금 대상 확대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 지원
外人 추납 기준 강화해 부정수급 차단
기금형 퇴직연금 2028년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차등지급 형태의 개편이 검토되며, 부부 감액제도도 완화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첫 보험료 대납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을 막는다. 퇴직연금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예상 지출과 함께 제도별 세부 시행 방안을 포함했다.

◆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는데, 내년 지급액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0~30%에는 올해의 35만원에서 3만원 늘린 38만원, 하위 30~45%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45~70% 구간에는 지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지급액 일부를 삭감하는 '부부 감액' 제도의 완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각각 20% 감액했는데, 앞으로는 소득하위 0~45%에 해당하는 가구는 감액 비율이 10%로 줄어든다.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하면 올해 부부합산 58만원을 지급받던 저소득층 가구는 내년엔 64만6000원(30~45%)이나 68만4000원(0~30%)을 받는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방식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국민연금과 다층체계로 고민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첫 보험료 대납'

국민연금은 사회초년생의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첫 보험료 대납'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도록 1개월분의 보험료를 정부가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이력이 발생하면 이후 '추후납입' 제도를 활용해 10년까지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최초 가입 시기를 앞당겨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18~60세 미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간주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 의무대상 예외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해 미취업 청년의 가입률은 높지 않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납입 제도의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라도 국민연금 납입 이력이 1개월 이상이라면 추후납입 제도를 통해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총 10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만큼 추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국내 비거주자의 추납 제도 악용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 장애연금 확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도 늘린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 장애)에만 지급됐던 장애인 연금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늘린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4%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확대한다.

퇴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오는 15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9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고, 오는 2028년 상반기부터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계좌 적립액을 직접 운용해야 했던 기존 퇴직연금 제도(DC형·DB형·개인형IRP)와 달리 운용기관이 전체 가입자의 적립액을 하나의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한다. 대표적인 '기금형 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을 꼽을 수 있다. 기금형은 전문가가 상품을 대신 운용하는 만큼 투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손실위험 대비 기대수익률도 안정적이다.

최근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말 "기금형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유럽 '中 배터리 의존 줄이기' 속도… 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EU 조달·보조금 역내산 요건 추진
배터리 3사 유럽 생산기반 강점
국산 소재 연계 공급망 구축 관건

유럽이 빠르게 높아지는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이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먼저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확대와 역내 생산 기준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유럽 현지 생산기반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과 국내 소재기업을 연계해 셀과 소재를 아우르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공조달과 보조금에 역내산 요건을 도입하고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는 현지 고용과 기술이전, 역내 조달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를 강화하고 전기차 보조금에 역내 생산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이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의 빠른 영향력 확대가 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3년 60.4%에서 지난해 약 30%로 낮아진 반면 중국 기업은 지난해 약 60%를 차지했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거론된다. 유럽외교협회(ECFR)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을 중국 선도 기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글로벌 셀 제조사로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삼성SDI와 SK온은 헝가리에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설비를 활용한 공급 확대 여건도 갖추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법안도 국내 기업의 유럽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과 소재를 일정 조건에 따라 역내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 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배터리 기업의 유럽 공공조달과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와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 제품 출하를 늘리며 유럽 생산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SK온은 헝가리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고객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삼성SDI는 유럽에서 대중형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확대와 LFP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원료·소재 공급망은 국내 기업이 유럽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도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소재기업을 활용해 원료와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대체 공급망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소재를 한꺼번에 제외하면 배터리 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산 소재와 부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공급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 폴란드 방산협력 확대… 천무 이어 K9 현지화

천무 유도탄 40억달러 공급계약
현지 생산공장 부지 확보도 완료
K9 후속계약·K9A2 협력 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의 방산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천무 유도탄 현지생산 사업이 40억달러 규모 공급계약과 공장 구축으로 진전된 가운데 K9 후속사업 협의도 이어지면서 오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 추가 협력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8~11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참가한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대공무기체계와 유럽 시장을 겨냥한 다목적 무인차량 등 무인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해 MSPO에서는 폴란드 방산업체 WB그룹과 한화WB어드밴스드시스템즈 설립 협정을 맺고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K용 유도탄 현지생산과 신형 미사일 공동개발에 나섰다.

협력은 이후 계약과 생산시설 구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국방부는 합작법인이 주도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약 40억달러(140억즈워티) 규모의 CGR-080 유도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호마르-K 사업의 세 번째 실행계약으로, 현지 생산 물량은 오는 2030년부터 공급된다. 지난 3월에는 무기공장 건설 허가가 발급됐고 6월에는 116.3578ha 규모의 공장 부지도 확보했다.

K9에서도 도입계약을 넘어 산업협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K9 672문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MSPO에서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9 생산·정비·개발과 폴란드형 K9 자주포(K9PL) 개발, 차세대 야전포 체계 공동 연구개발 등이 협력 분야로 제시됐다.

이 같은 협력은 지난 2023년 12월 약 3조4500억원(26억달러) 규모의 K9 2차 실행계약에도 반영됐다. K9 152문 공급과 함께 유지보수 부품의 폴란드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현지 방산업계의 정비·개량을 위한 기술지원이 포함됐다.

현재는 3차 실행계약 등 K9 후속사업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보이치에흐 발춘 폴란드 국유자산부 장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차세대 K9 자주포(K9A2)의 폴란드 현지생산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9A2는 현재 한국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으로, 현지생산이 구체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K9 3차 실행계약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당장 계약 체결 등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며 "향후 K9A2 도입을 원하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